2017년 6월 17일 시행 / 지방직 9급 필기시험

행정학개론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송상호 교수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답** ④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통제 권한으로 옳은 지문이다
②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주요정책이 법률로 구체화 되는데 법률의 위헌결정은 정책의 폐지를 의미하므로 위헌결정은 큰 영향을 미친다.

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소비자안전규제 ② 산업재해규제
③ 환경규제 ④ 진입규제

2. **정답** ④
해설 진입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위한 경제적 규제이다. 나머지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3. **정답** ③
해설 분업의 원리로 전문화가 고도화되면 자신의 분야만 잘 알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시야가 좁은 전문화된 무능현상이 일어나 부서간의 조정이 어려워 진다.
① 계층제(hierarchy)의 원리란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에 따라 조직구성원들 간에 상하의 계층이나 등급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솔의 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혼자서 직접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한다.
④ 부성화의 원리란 부처조직편성의 원리 혹은 기준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제안 규정」 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4. **정답** ②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해설 ①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겸한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공 중심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5. **정답** ②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4. 공공기관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6. **정답** ③
해설 문제의 구조화는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체화이다. W.Dunn은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를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

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7. **정답** ①
해설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이 높은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본다.
집행기관 간 계층적 통합성(계층적 질서)이 약화되면 집행과 관련된 많은 독립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정·집행을 방해하게 된다. 오늘날 관료제적 계층성의 약화가 정책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 경우 명확하여 이해가 용이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
③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지지가 힘들다.
④ 표준운영절차(SOP)는 갈등과 저항이 적은 배분정책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8. **정답** ③
해설 행정기관은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수행한다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기능이다.

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9. **정답** ④
해설 ④는 V.Vroom의 기대이론이 아니라 Adams의 형평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① 기대성에 대한 옳은 설명
② 수단성에 대한 옳은 설명
③ 유의성에 대한 옳은 설명

10.「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10. **정답** ①
해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일반직,특정직,별정직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중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11. **정답** ④
해설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3V(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크기(Volume))이다.
빅 데이타
1. 구성
①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기법 등의 활용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지식 발견 기법
②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지식 발견 기법
③ 오피니언 마이닝: 다양하고 방대한 의견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지식 발견 기법
2. 특성
① 방대한 규모(volume)

② 빠른 속도(velocity)
③ 다양한 형태(variety): 수치화된 데이터, 문자 또는 영상 데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
3.전제 조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②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③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2. **정답** ①
해설 분업은 미리 정해진 표준화되고 루틴화된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료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② 분업의 단점으로 분업이 지나치게 고도화되면 단순업무의 기계적 반복수행으로 소외감이 유발될 수 있다.
③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반복적 업무수행을 하는 분업의 장점이다.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13. **정답** ①
해설 공기관이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하여 민영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공기업의 민영화는 감축의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줄이는 것이다.
③ 공기업을 민영화는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여 보편적 서비스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수입으로 공공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

14.「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14.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원칙은 (완전성 =예산총계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④의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최근(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외에서 제외되었다.
완전성 원칙의 예외
1. 순계예산
징세비를 공제하고 순세입만 계상한 예산이다.
2. 기금
예산 외로 운영된다. 그런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이종수 외)도 있다.
3. 현물출자(現物出資)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한다.
4. 전대차관(轉貸借款)
전대차관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轉貸)할 것을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차주(借主)로 하여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감을 차입(借入)하는 것'으로서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차관물자대는 '외국의 실물자본을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대금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차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전대차관은 예산에서 제외되나, 차관물자대는 예산에 계상된다. 차관물자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5. 수입대체경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초과수입·초과지출 가능).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15. **정답** ②
해설 교차행정조직에 의한 통제는 인사혁신처(인사권), 기획재정부(예산권), 국무총리실(심사평가)등으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옳은 지문
④ 감사원이 대표적인 독립통제기관으로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6. **정답** ②
해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① 탄력세율 제도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세율을 조례등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제도이다
③ 지방재정법 37조내용으로 옳은지문이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7.「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17. **정답** ③
해설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100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②④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한다.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③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18. **정답** ④
해설 배태성이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①③ 동형화는 조직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닮아 가는 것 즉 유사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동형화의 유형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예산회계법」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19. **정답** ②
해설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정부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20. **정답** ③
해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임명에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공무원(감사원장),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나 이를 보조할 공무원(국무총리, 각부처 장·차관, 국가정보원 원장·차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으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본다.